“감사원 ‘권익위 감사’ 허위…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해야”

민주 원내대책회의, 감사원 감사결과 맹공…직권남용 국조 추진
‘자녀 학폭 의혹’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기 촉구…강행시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명백한 허위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스스로 정치감사임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관련 제보에 묵과하지 못할 내용이 담겼다며 야심차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 감사’로 끝났다”면서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려는 유 사무총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모든 직권남용 범죄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익명의 제보자와 정부·여당이 꾸며낸 얘기에서 시작한 정치 감사였다”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장관은 정부청사 앞에서 출입증을 찍지 않고 출퇴근 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고 몰아세웠다”며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전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법에 따르면 사무처는 행정사무처리 기구에 불과한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에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감사위의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감사원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아울러 헌법을 어기고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유 사무총장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포기’를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사검증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동관 자녀 학폭 은폐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위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폭 은폐 의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동관 특보가 관여된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싶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에서 활동했던 전직 시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하나고 학폭 및 입시비리 의혹’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의원모임 ‘친기업’ 기조 변화 주문

‘글로벌 기업을 돕다’ 세미나…“과감한 지원, 대중정당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당의 강령에도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에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리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측도 참석해 “기업과 정치권이 ‘원 팀’이 되자”고 호응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공정(公正)을 중심으로 기업을 바라본 게 사실”이라며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과감히 목소리를 내고 지원하는 게 제1당이자 대중정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기업의 ‘오너 경영’ 체제에 대해 “한국의 정서·역사·문화, 국민성과 결부됐고 그에 맞는 기업문화가 됐기에 삼성 같은 일류기업이 나타났다”며 “세계적 기업을 만든 기업문화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균형발전위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공론화

오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자치입법·행정·재정 분권 방안 제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3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의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위원회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18일 창립대회

각계 3241명 발기인 참여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추진위원회(위원장 정구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은 지역 시·도민들을 비롯한 재야 시민사회, 장애인, 정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인 등 324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창립대회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재단 부이사장과 3남 김홍걸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지역에서는 정구선 재단설립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김정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상임대표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안성례·이명자 전 5월 어머니집 관장, 강정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 등 지역 원로인사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80년 5·18 당시 신군부세력으로부터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으로 김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원로 성직자 윤공희 전 대주교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이날 행사에서 식전 축하공연으로 가수 남진씨와 신형원씨의 공원도 예정되어 있다.

최경주 김대중재단 이사는 “김대중재단은 이번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광주·전남 시·군·구 지역과 직능지회 조직구성을 통해 시도민들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유산과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